

이재명 “R&D예산 복원에 당력 총동원”

대전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의 주제 과학·산업계 종사자 간담회 메가서울 비판 균형발전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대전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등 현장 행보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둔 채 철저히 민생과 정책 위주의 행보로 내년 총선에 대비해 기틀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날 일정은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지방 방문이다. 이 대표는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다”며 “R&D 예산을 복원에 대한민국이 지속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특화 도시인 대전의 최대 예산 현안을 부각하는 동시에 복원 의지를 강조하며 충청권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비판하며 국토균형발전론도 강조했다. 이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통상 캐스팅 보트로 여저진 충청권을 향한 ‘맞춤형’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에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국민의 걱정거리를 늘렸다”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의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포 혁신도시로 충청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당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대전 유성구의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과학기술·산업계 종사자들과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민주당이 예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며 “가장 당연한 과제인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 성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 역할은 단기 성과로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자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R&D 예산 삭감에 예산이 낭비되고 잘못 쓰이는 데가 있다는 의심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더기 때문에 장 담그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잘못 쓰이는 부분을 통제, 제재, 예방하는 조치로 해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입법 추진...“임금체불 등 개혁”

건설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적정임금제’ 안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근로자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고용불안, 안전사고 등의 현실을 바꾸려면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상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며 “전 부문에 걸쳐 적정임금제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지만, 건설사들이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을지로위의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적정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지급(건

설근로자의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는 제도) 대상 공사 범위를 공공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아울러 을지로위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공공 발주에서 적정 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적정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힘, 완충기간 두고 ‘메가서울’ 단계적 편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는 유예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장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편입이 이뤄지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계’여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여야 합의 외교·통일부 예산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026억원으로 통과됐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55억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 장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억원 늘어난 1280억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원 순증한 1585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원 꺾인 3289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846억원으로 의결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신정훈 “농어업회의소법 정기국회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5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및 ‘농어민의 농정참여와 농어업회의소-현장 성과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촉구한 뒤 제정의 당위성을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호소했다. 여기서, 신정훈, 홍문표,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 김태호,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가 공동주최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림법안소위를 하루 앞두고 절박한 마음으로. 농어업인은 식량안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면서도 수십 년간 소외되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250만 농어업인의 ‘법정 대의기구’를 의미한다”면서 “지역, 품목, 축종 등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여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상공인, 의료인단체 등은 법률에 근거해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응집해 정부에 전달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며 “농어업인도 스스로를 대표하는 ‘법정 대의기구’를 통해 하나된 농민의 단단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농어업인의 오랜 염원을 이루고 지방과 농촌의 위기를 타개할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